

전북 재정자립도 31.63%... 하위권

'2015년 지방재정 정보' 통합공시 전국 평균 54.02% 전년 대비 2.12%p ↑ ... 전남·강원 이어 최하위권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을 벗어 나질 못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평균 54%를 돌파했지만 전북은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재정자립도 등 33개 항목의 '2015년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정보를 '지방재정 365'에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종 예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54.02%로 2014년 51.9%보다 2.12%포인트 올랐다.

이는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지방세 징수액 증가, 세의 수입 관리 강화 등을 상승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전북은 31.63%로 전남 29.47%과 강원 31.18%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일반회계 예산 중 자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보여주며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세입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30%에 올라섰다. 전북은 지난 2012년 26.85%에서 2013년 27.01%, 2014년 29.38%로 해마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말 전북 자치단체 부채는 전북도청 등 일부를 제외하면 전년에 비해 대체적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본청의 자산(13조9,896억1,200만원)대비 부채는 9,064억으로 6.48%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 6.01%보다 0.4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부채비율이 증가한 도내 자치단체는 익산시(8.06%→8.16%)와 무주군(0.38%→0.43%), 순창군(0.57%→0.65%), 부안군(1.49%→1.83%)이 포함됐다. 특히 익산시의 부채비율은 전북도내에서 가장 높은 8%대를 이어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 관계자는 "지방채 한도액 제도 등 엄격한 재무관리와 공개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이 개선된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정읍 미생물가치평가센터 준공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과도 정읍시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미생물가치평가센터가 완공됐다. 26일 정읍시 신정동에 소재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에서 장규태 생명연 원장, 김일재 도 행정부지사, 김생기 시장과 장학수 도의회 의원, 안길만 정읍시의회 의원 및 그 밖의 산학연 관계자와 시민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열렸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총 280억원이 투입된 미생물가치평가센터는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내에 연면적 7천189㎡(지하, 지상3) 규모로 건립됐다. 지난 1월 대전 본원의 미생물자원센터(KCITC)가 이전했고, 센터연구원 45명이 정읍으로 이전했다. 미생물가치평가센터에서는 앞으로 미생물 자원의 기능적 재분류를 통한 고부가가치 자원의 확보와 함께 국가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수입 미생물 대체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미래 바이오산업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생물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산·학·연 자원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 소재 및 농식품 산업에서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산업과 축산과 미생물 기반 바이오 공정 기술의 첨단화를 통한 차세대 바이오 산업 경쟁력 확보, 그리고 국산 고부가가치 생물 자원을 활용한 자원 수입 대체 효과 등이 기대된다. 김생기 시장은 "미생물가치평가센터 준공을 계기로 정읍 첨단과학연구단지 내에서 활발한 산업화 성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구마의 모든 것 26일 전주시 완산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에서 열린 '고구마의 모든 것' 특별전시회장을 찾은 어린이 관람객들이 다양한 고구마를 들여다보고 있다.

전북 인사발전방안 마련한다

'인사발전 추진위' 출범... 문제점·개선방향 논의
전북도가 '전북인사발전 추진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 및 관련 전문가로 이뤄진 '전북인사발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출범식을 가졌다. 추진위는 지방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전북도 인사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인사발전 주제별 포럼과 토론, 학습을 비롯해 인사제도 개선 요구와 지방 인사발전을 위한 방안제시 등 지역인사발전 추진을 위한 교두보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전북인사발전 추진위원회를 통해 지역 인사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미래 행정변화에 도 공무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북경찰청 기동1중대 '전국 우수부대' 선정
전북지방경찰청은 26일 기동 1중대가 올해 치안성과 평가에서 '전국 우수부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청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전국 71개 부대를 대상으로 지휘 체계와 부대 환경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그 결과 전북경찰청 기동 1중대는 전국 2위로 선정돼 우수부대 표창과 함께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는 지난 1991년 부대가 창설된 이후 첫 성과다. /뉴스시

"각종 민원 신고·상담 110번"

28일부터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 119·112 제외

오는 28일부터는 110 번호만 기억하면 모든 민원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20여 개에 달했던 각종 신고·상담 전화번호가 110 하나로 통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전면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재난·화재 신고는 기존 119, 범죄 신고는 112, 그외의 모든 민원전화는 110번을 누르면 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난·범죄·민원 등 3개 번호로 단순화한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왔다. 28일부터는 시범 운영 기간을 마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수도 고장신고(121)·가스 사고신고(1544-4500)·인권 침해 상담(1331)·국민연금 상담(1355) 등 기존의 각종 신고 및 상담전화는 모두 110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단 화재신고(119)와 범죄신고(112)는 기존 번호를 이용해야 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110 상담콜센터에는 125명의 상담인력이 주·야간 24시간 교대 근무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종 제도와 관련된 기본적인 설명은 110 상담원을 통해 들을 수 있다. 세부적인 문의 시에는 해당 기관으로 연결을 받을 수 있다. /뉴스시

이건식 김제시장 징역 3년6개월 구형

선거 때 자신을 도운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건식 김제시장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25일 오후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선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시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 면역증감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후배 정모(62)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14억6300만원 상당의 가축보조사료를 김제시에서 납품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시 예산으로 별도 구매가 불필요함에도 정씨의 회사에서 생산한 토양개량제 1억4800만원 상당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이 시장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시장에 자신 이 운영하는 사료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김제시에 납품하기 위해 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후배 정씨에 대해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9일 오전 9시50분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뉴스시

'대민' 현장 공무원 '재산등록의무' 제외

인사처, 개정안 입법예고... 등대관리·운전·시설관리 등
정부가 인·허가와 단속 등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됐으나, 실제 업무가 대민 업무와 무관한 공무원들을 '재산등록의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직자윤리법은 대민 업무 담당 7급 이상 공무원 모두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능직군이었던 등대지기나 청소차량 운전원 등 실제 대민 업무와 무관한 직원들까지 재산등록의무에 포함되면서 발생한 상대적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인사혁신처는 등대관리, 운전, 시설관리 등을 수행하는 현장 실무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의무를 경감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사처는 그동안 일부 현장 공무원들이 인·허가 등 대민업무 부서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왔으며, 특히 퇴직 후에도 취업심사대상자로 분류되면서 고위직 퇴직자와 동일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1,500명의 현장 근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